

POLITICS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전통발효식품 교육 근거 마련 송형곤 도의원, 조례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장담그기와 김장문화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식생활 서구화로 청소년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학교 교육을 통한 전통발효식품 체험 및 교육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매년 교육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 교육 지원 사업 추진 △학교 내 교육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송형곤 의원은 “전통발효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감지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익히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학교에서 전통발효식품 교육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감지를 비롯한 전통 음식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나이가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국의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시, 창업기업 인재 채용 지원 경력자 연봉 등... 업체 모집

광주시가 기술인재 채용과 경력직 이직 등으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의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우수 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광주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우수 인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기존 우수 경력자의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수 인재 채용 지원은 총 20여명을 모집하며 관련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올해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연봉의 70%,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우수 경력자 지원은 총 30명을 모집하며 해당 창업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의 연봉상승분에 대해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또는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광주테크노파크(062-602-7227, 7221)로 하면 된다.

주최의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남지사·군수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피켓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헌법재판소, 책임감 갖고尹 즉각 파면하라”

김영록 지사·시장군수협·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 “탄핵선고 지연될수록 국가적 혼란 더욱 심화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기초단체장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

법재판소는 역사적 소명 의식과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목포·나주·광양

·곡성·구례·보성·장흥·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 등 13개 시장·군수, 시도의원,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문금주, 권환영, 김문수, 신정훈, 박근택 등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남지사는 “윤석열 파면은 시대정신이고 정의이고 절제절명의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라며 “윤석열

이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온다면 제2의 비상계엄보다 더 혹독한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구속 이후 간신히 되찾았던 작은 평온함은 그의 석방으로 산산이 부서졌다”며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가적 혼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정열 기자 holbu@gwangnam.co.kr

‘매일 광화문으로’ 민주당 후보 행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2일 오후 4시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8.7km를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후보 행진’에 나섰다.

도보 행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각에 이어갈 방침이다.

거리 투쟁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한편 국민의 호응을 이끄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후보행진 출정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행진을 이어간다”며 “우리의 행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독재의 칼로 휘두르는 자가 한순간이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행진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며 “오늘은 민주주의 헌정 수호

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등조하는 것”이라며 “선고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은 커지고 국민의 불안과 갈등도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상식이, 정의가 이긴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행진할 것”이라며 “행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진은 사전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하고, 피켓과 구호 제작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민주당은 집회 신고가 이뤄진 13일부터는 차도를 이용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행진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며 “오늘은 민주주의 헌정 수호

출정식서 박찬대 “민주주의 지키는 투쟁” 정국불안 해소 강조... 현장 최고총 김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의 날로 지정한다. 광화문 행진을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보 행진과 현장 최고위가 ‘현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의 즉시 파면을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한 것”이라며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 혼란이 가중된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소속 3선 의원과 재선 의원들은 각각 이날도 빠른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오전 8시계 현재 주변에서 ‘인간 띠 잇기’에 나선다.

민주당 ‘제2기 기본사회위원회’ 닷 올려

광주위원장 전진숙·전남위원장 조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제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비전 선포 및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급이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박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출사에서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험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출사에서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은 걱정되는 국민의 삶을 다시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내란 종식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석 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27명, 광역위원장은 17명이 각각 임명됐다.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은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이, 전남기본사회위원장은 조계원 의원(여수시)이 각각 맡았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모두가 손잡고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경기도 정책수석 제임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동 상임대표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도 함께 출범했다.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복기왕 의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 위원회 출범 약속이 우선은 내란 종식을 위한 투쟁의 약속,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약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상속세 개편 혼선...집수리에 재건축 발표한 꼴”

안도걸 의원, 정부·여당 간 엇박자 행보 비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구·사진)은 12일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파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안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75년간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안 의원은 또 “여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이에 변경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 정부가 불꽃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